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하루빨리 귀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목표로!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는 17 명에 관한 사안 개요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당시 나이와 실종 장소).

일본 정부는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는 인식 하에 납치 피해자 인정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즉시 귀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1

1977년 9월 19일
우시쓰 사건

구메 유타카 씨
(52 세 , 이시카와현)

이시카와현 우시쓰 해안 부근에서 실종 . 생존 여부 확인 안 됨 (북한은 입북 부인).

2

1977 년 10 월 21 일
여성 납치용의 사안

마쓰모토 교코 씨
(29 세 , 돗토리현)

자택 부근의 뜨개질 강좌에 간다고 나간 뒤 실종 . 생존 여부 확인 안 됨 (북한은 입북 부인).

3

1977 년 11 월 15 일
소녀 납치용의 사안

요코타 메구미 씨
(13 세 , 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하교 도중 실종 . 생존 여부 확인 안 됨 (북한은 '자살' 했다고 주장).

4

1978 년 6 월경
전 음식점 종업원 납치용의 사안

다나카 미노루 씨
(28 세 , 효고현)

유럽으로 출국한 뒤 실종. 생존 여부 확인 안 됨(북한은 입북 부인).

5

1978년 6월경
리은혜 납치용의 사안

다구치 야에코 씨
(22 세 , 불명)

생존 여부 확인 안 됨 (북한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고 주장).

6

1978 년 7 월 7 일
아베크 납치용의 사안

지무라 야스시 씨
(23 세 , 후쿠이현)

지무라 후키에 씨
(결혼 전 성 : 하마모토)
(23 세 • 후쿠이현)

'둘이서 데이트하러 간다' 고 외출한 뒤 실종 .
2002 년 10 월 귀국 .

7

1978 년 7 월 31 일
아베크 납치용의 사안

하스이케 가오루 씨
(20 세 , 니가타현)

하스이케 유키코 씨
(결혼 전 성 : 오쿠도)
(22 세 , 니가타현)

하스이케 씨는 '잠깐 나간다 . 금방 돌아오겠다' 고 외출한 뒤 실종 . 오쿠도 씨도 외출한 뒤 실종 .
2002 년 10 월 귀국 .

8

1978 년 8 월 12 일
아베크 납치용의 사안

이치카와 슈이치 씨
(23 세 , 가고시마현)

마스모토 루미코 씨
(24 세 , 가고시마현)

'바닷가에 석양을 보러 간다' 며 나간 뒤 실종 . 생존 여부 확인 안 됨 (북한은 '심장마비로 사망 (이치카와 씨는 해수욕 중)' 했다고 주장).

9 1978 년 8 월 12 일
모녀 납치용의 사안

소가 히토미 씨
(19 세 , 니가타현)

소가 미요시 씨
(46 세 , 니가타현)

'둘이서 쇼핑하러 간다' 고 나간 뒤 실종 .
히토미 씨는 2002 년 10 월 귀국 .
미요시 씨는 생존 여부 확인 안 됨 (북한은 입북 부인).

10 1980년 5월경
유럽에서의 일본인 남성
납치용의 사안

이시오카 도오루 씨
(22 세 , 유럽)

마쓰키 가오루 씨
(26 세 , 유럽)

유럽 체류 중 실종 . 생존 여부 확인 안 됨 (북한은 이시오카 씨가 '가스 사고로 사망' , 마쓰키 씨는 '교통사고로 사망' 했다고 주장).

11 1980년 6월 중순
신광수 사건

하라 다다아키 씨
(43 세 , 미야자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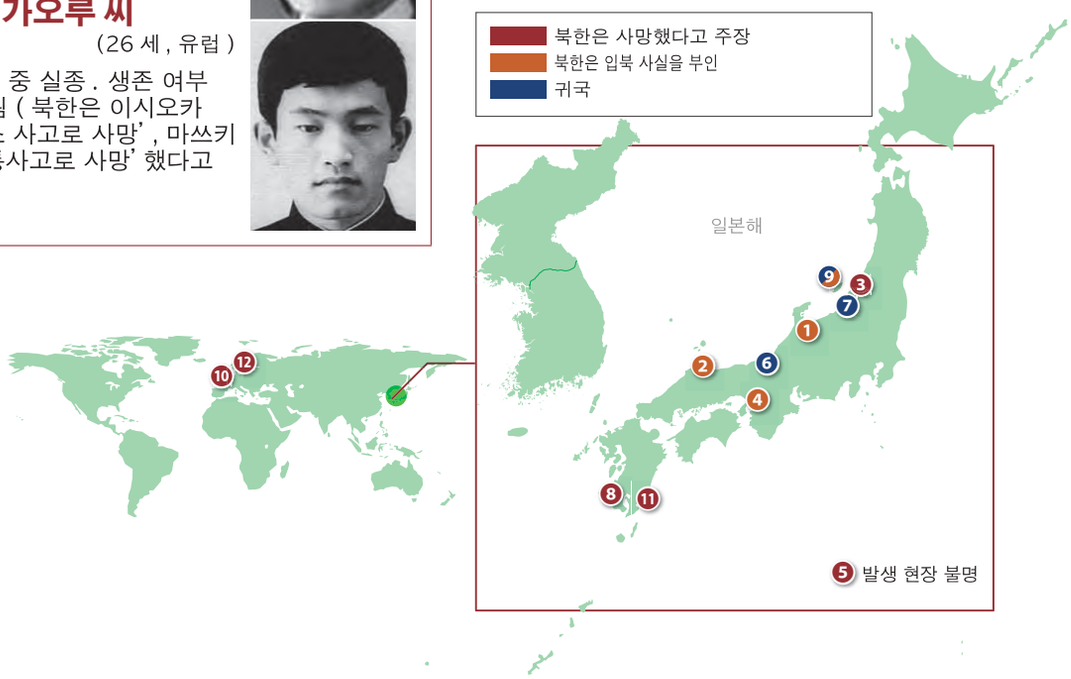
미야자키현 내에서 발생 .
생존 여부 확인 안 됨 (북한은 '간경변' 으로 사망했다고 주장).

12 1983 년 7 월경
유럽에서의 일본인 여성
납치용의 사안

아리모토 게이코 씨
(23 세 , 유럽)

유럽에서 실종 .
생존 여부 확인 안 됨 (북한은 '가스 사고로 사망' 했다고 주장).

■ 납치 피해자의 실종 장소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 873명

현재 일본 정부는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로 위의 17명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자 873명(2021년 11월 현재)에 대해 일본 국내외에서의 정보수집, 수사 및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 납치된 조선적(朝鮮籍) 납치 피해자(오누이 납치용의 사안)

경찰은 1974년 6월 중순에 조선적(朝鮮籍)을 가진 어린 누나와 남동생(고경미 씨, 고강 씨)이 실종된 사안을 북한에 의한 납치용의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납치는 국적과 상관없이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북한 측에 원상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일본으로 귀국시킬 것과 이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인정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한시라도 빠른 귀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1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많은 일본인들이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행방불명 되었다. 일본 당국에 의한 수사 및 망명한 북한 공작원의 증언을 통해 이 사건들의 대부분이 북한에 의한 납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밝혀졌다. 1991년 이후 일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납치 문제를 제기했으나 북한 측은 완강히 부인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 9월에 열린 제1차 일조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납치를 시인하고 사죄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같은 해 10월, 5명의 납치 피해자가 24년 만에 일본으로 귀국했다.

그러나 이들 외에 생존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않은 일본인들에 대해서 북한은 2004년 5월에 열린 제2차 일조 정상회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즉시 재개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지금까지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북한에 남겨진 피해자들은 지금도 모든 자유를 빼앗긴 채, 오랜 세월 동안 북한에 잡혀있는 상태로 현재도 구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1997년에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가족회)'를 결성하는 등 피해자 구출을 촉구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2021년 10월 현재 1,5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총리대신에게 제출했다.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 ('가족회') 결성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는 일본의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귀국한 5명을 포함한 17명을 북한 당국에 의한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일본 국내에서의 일본인 외(조선적:朝鮮籍) 납치용의 사안 및 이른바 특정 실종자(주)를 포함해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북한 측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증거 제시가 없는 이상 생존 여부가 불분명한 납치 피해자는 모두 생존해 있다는 전제하에서 납치 피해자 인정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즉시 귀국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납치 관련 진상 규명과 납치범의 인도를 계속적으로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일조 평양선언에 의거해 모든 납치 피해자의 한시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국교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주) 특정 실종자란 민간단체인 '특정 실종자 문제조사회' 가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독자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실종자를 의미한다.

2 납치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북한의 협상

1. 제1차 일조 정상회담 (2002년 9월)

제 1 차 일조 정상회담

2002년 9월 17일에 열린 제1차 일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당시)은 오랜 기간동안 부정해 왔던 일본인 납치를 처음으로 시인하고 사죄하였으며, 당시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인정한 13명 중 4명은 생존, 8명은 사망, 1명은 입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주). 또한 일본 측이 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던 소가 히토미 씨의 납치를 시인하고 생존을 확인했다(한편 북한 측은 그 후 조사에서 동시에 행방불명이 된 히토미 씨의 모친인 소가 미요시 씨에 대해서는 입북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관계자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동시에 가족 면담 및 귀국을 위한 편의 제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당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당시)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조사 계속과 생존자의 귀국,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주) 북한은 지무라 야스시 씨, 지무라 후키에 씨, 하스이케 가오루 씨, 하스이케 유키코 씨의 4 명에 대해서는 생존을 확인했다. 한편 요코타 메구미 씨, 다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쓰모토 루미코 씨, 이시오카 도오루 씨, 마쓰키 가오루 씨, 하라 다다아키 씨, 아리모토 게이코 씨의 8 명에 대해서는 사망, 구메 유타카 씨에 대해서는 입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03 년 1 월에 소가 미요시 씨를, 2005 년 4 월에 다나카 미노루 씨를, 2006 년 11 월에 마쓰모토 교코 씨를 정부 인정 납치 피해자로 인정했다.

2. 사실조사팀 파견 (2002년 9월~10월)

24 년 만에 귀국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

2002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에 걸쳐 일본 정부는 사실조사팀을 북한에 파견해 생존자와 면담하였으며 생존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정보 수집에 노력했다. 그러나 북한이 제공한 정보가 처음부터 한정되어 있었으며 내용면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의심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았다. 북한이 마쓰키 가오루 씨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제공한 '유골'은 법의학적 감정을 한 결과 다른 사람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해 10월 29일과 30일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2차 일조 국교정상화협상에서 일본 정부는 150개 항목에 달하는 의문점을 지적하고 더 많은 정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충분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3. 납치 피해자 5명 귀국 (2002년 10월)

2002년 10월 15일, 납치 피해자 5명(지무라 야스시 씨, 지무라 후키에 씨, 하스이케 가오루 씨, 하스이케 유키코 씨, 소가 히토미 씨)이 귀국하여 가족과 상봉했다.

일본 정부는 귀국한 5명의 납치 피해자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포함해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같은 해 10월 24일에 5명의 납치 피해자가 일본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 확보 및 조속한 귀국 일정 확정을 북한 측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4. 제2차 일조 정상회담 (2004년 5월)

제 2 차 일조 정상회담

2004년 5월 22일에 고이즈미 총리(당시)가 다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당시)과 납치 문제를 비롯한 일조 간의 문제와 핵, 미사일과 같은 안보상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 북한 측은 지무라 씨의 가족과 하스이케 씨의 가족 총 5명이 같은 날 일본으로 귀국하는 것에 동의한다.
- 생존이 확인되지 않은 납치 피해자에 대해서는 북한 측이 즉시 진상 규명 조사를 백지상태에서 재개한다.

이 합의에 따라 지무라 씨 가족과 하스이케 씨 가족 총 5명이 고이즈미 총리(당시)와 함께 귀국했다. 소가 히토미 씨 가족 3명은 7월 18일에 귀국, 방일이 실현되었다.

5. 일조 실무자협의 (2004년 8월 및 9월: 베이징, 같은 해 11 월: 평양)

(가) 2004년 8월(제1차) 과 9월(제2차)에 걸쳐서 일조 실무자협의가 개최되었다. 북한 측은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납치 피해자들 관련 재조사의 중간 결과에 대해서 설명했으나 정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

(나) 2004년 11월의 제3차 협의는 50여 시간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 협의에서는 북한 측 '조사위원회'와의 질의응답을 비롯해 총 16명의 '증인'들로부터의 직접 청취, 납치 관련 시설 등에 대한 현지 시찰, 요코타 메구미 씨의 '유골'이라는 것 등의 물적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 협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인정은 하지 않았으나 북한에 의한 납치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특정 실종자 등) 문제에 대해서 북한 측에 5명의 이름을 제시하며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 5명에 대해 입북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회답했다(일본 정부는 그 후의 협의에서도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과 관련해서 정보 제공을 거듭 요구해 오고 있다).

(다) 일본 정부는 제3차 협의에서 북한 측이 제시한 정보 및 물적 증거에 대해 즉시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8명 사망, 2명은 입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주)"는 북한 측 설명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었다. 또한 지금까지 제공된 정보 및 물적 증거에는 의문점이 많으며 요코타 메구미 씨의 '유골'이라는 뼈의 일부에서 메구미 씨와 다른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북한 측에 제의하고 강력히 항의했다.

(주) 구메 유타카 씨와 소가 미요시 씨 2 명을 가리킨다 .

6. 일조 포괄병행협의 (2006년 2월 : 중국 베이징)

2006년 2월에 개최된 일조 포괄병행협의에서는 총 11시간에 걸쳐 납치 문제 관련 협의가 이루어졌다. 일본 측은 거듭 생존자의 귀국,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 피의자의 인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생존자는 이미 모두 귀국했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또한, 진상규명에 있어서는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는 납치 피해자에 대한 재조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조차도 약속하지 않았으며 피의자의 인도도 거부했다.

7. 일조 국교 정상화를 위한 작업부회 (2007년 3월: 베트남 하노이, 같은 해 9월: 몽골 울란바토르)

2007년 2월의 6자회담에서 설치하기로 한 '일조 국교 정상화를 위한 작업부회'의 제1차 회담이 같은 해 3월에 개최되었다. 일본은 모든 납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귀국, 진상규명, 피의자의 인도를 다시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대응을 보이지 않았다. 9월에 개최된 제2차 회담에서도 납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8. 일조실무자협의 (2008년 6월 : 중국 베이징, 같은 해 8월 : 중국 선양)

(가) 2008년 6월에 개최된 일조실무자협의에서 일본 측은 납치 문제와 관련해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 진상규명, 피의자의 인도를 재차 요구했으며 동시에 북한 측이 납치 문제를 포함한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일본도 현재의 대북조치 중 일부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거듭 설명하며 북한 측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그 결과 북한 측은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변경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향후 취하기 위한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같은 해 8월 협의에서는 같은 해 6월 협의에서 양측이 표명한 조치, 특히 북한의 납치 문제 재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그 결과 북한 측은 권한이 부여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납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존자 발견과 귀국을 위한 전면 조사를 개시하고 동시에 일본 측도 인적 왕래에 대한 규제와 전세기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다) 그러나 2008년 9월 4일에 북한 측으로부터 지난 일조 협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갑작스러운 일본 정권 교체(주: 후쿠다 총리(당시)의 사임)로 새 정권이 합의사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될 때까지 조사 개시를 보류한다는 취지의 연락이 있었다.

9. 일조정부간협의 (2012년 11월 : 몽골 울란바토르)

2012년 11월, 4년 만에 북한과의 협의인 일조 정부간협의가 개최되었다. 이 협의에서 납치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지금까지의 경위와 서로의 생각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향후에도 협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 측은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북한 측에 제기하고 논의했다.

제2차 협의는 12월 5일과 6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같은 달 1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면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0. 일조 정부간협의 (2014년 3월 : 중국 베이징)

2014년 3월 3일 및 같은 달 19일과 20일에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일조 적십자회담을 기회로 이용해 1년 4개월만에 일조 정부 간(과장급)에서 비공식 의견교환을 하고 정부간협의 재개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3월 30일과 31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조 정부간 협의에서는 양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폭넓은 제반 현안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하게 논의했으며 향후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측의 기본적 생각에 관해 문제 제기를 했다.

11. 일조 정부간협의 (2014년 5월 : 스웨덴 스톡홀름)

2014년 5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일조 정부간협의에서 북한 측은 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하기로 약속했다(스톡홀름 합의). 일본 측도 북한 측의 이러한 움직임을 고려해 북한 측이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조치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12. 일조 정부간협의 (2014년 7월 : 중국 베이징)

2014년 7월 1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조 정부간 협의에서는 북한 측으로부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 책임자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일본 측은 이 위원회에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되어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7월 4일, 북한 측은 관영 매체를 통해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 구성, 조사 방법 등에 관해 일본 측의 이해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국내외에 공표하였고 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관한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한편 일본 측은 인적 왕래의 규제 조치와 지불 보고 및 지불 수단 등 휴대수출신고의 하한 금액 인하조치를 해제함과 동시에 인도주의적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 선박의 입항을 허가하기로 했다.

일조 정부간협의 (2014 년 7 월)

13. 일조 외교 당국 간 회담 (2014년 9월: 중국 선양)

2014년 9월 29일 북한으로부터 조사 현황에 관한 설명을 보고 받기 위해 일조 외교 당국 간 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에서 북한 측은 현 단계에서는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통보할 수는 없지만 일본 측이 평양을 방문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원과 면담하면 조사의 현황에 관해 더욱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4. 특별조사위원회와의 협의 (2014년 10월 : 평양)

2014년 10월에 평양에서 열린 특별조사위원회와의 협의에서 일본 측은 납치 문제가 최우선과제라는 점,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확보 및 즉시 귀국, 납치에 관한 진상규명과 납치 실행범의 인도가 필요하다는 점, 정부 인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를 발견하고 한시라도 빨리 안전하게 귀국시키는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전달했다. 또 신속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한시라도 빨리 통보하도록 북한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북한 측으로부터는 위원회 및 지부의 구성과 같은 체제, 증인과 물증을 중시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각도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최고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특수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입북 유무, 경위, 생활 환경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체류했던 초대소터 등 관련 장소를 재조사함과 동시에 새로운 물증과 증인 등을 찾는 작업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15. 북한에 의한 일방적인 특별조사위원회 해체 선언 (2016년 2월)

2016년 북한은 1월에 핵실험을 실행하고 2월에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같은 달 독자적인 대북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의 전면 중지와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일본은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였으며 더불어 스톡홀름 합의를 파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 북한이 이 합의에 따라 하루빨리 모든 납치 피해자를 귀국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16. 최근의 움직임

최근에도 일본은 북한을 상대로 반복해서 일본의 기본 입장을 전달해 왔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에 개최된 평창 동계 올림픽의 개회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리셉션에서 아베 총리는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당시)에게 납치 문제, 핵, 미사일 문제를 거론하여 일본 측 입장을 전했다. 특히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포함해 납치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당시)은 아베 총리(당시)의 요청에 따라 2018년 6월과 2019년 2월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납치 문제를 거론했다(자세한 내용은 후술).

3 국제사회의 노력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 자체적으로 북한 측에 대해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국가들로부터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얻는 것 또한 꼭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외교상의 모든 기회를 활용해 납치 문제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는 한국에도 다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귀국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의 증언에 의해 태국, 루마니아, 레바논에도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 밖에 북한에서 귀환한 한국인 납치 피해자 등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인 등의 납치 피해자도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납치 문제는 기본적 인권 침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문제다.

유엔 총회에서 일반토론 연설을 하고 있는 스가 총리(당시)
(2021 년 9 월)

1. 국제연합(유엔)

(가) 유엔에서는 납치 문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북한인권상황결의가 인권이사회에서는 14년 연속 14번, 유엔 총회에서는 16년 연속 16번 채택되었다(2021년 11월 현재). 2020년12월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국제적인 납치 문제,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시 귀국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강조하고 납치 피해자 및 가족이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 받고 있는 크나큰 고통, 특히 2014년 5월의 일조 정부간협의에 따라 북한이 모든 일본인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 북한이 전향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측에 대해 모든 강제실종의 제기에 대한 대처, 피해자 가족에 대한 피해자의 생존 여부 및 소재에 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제공, 모든 납치 피해자에 관한 모든 문제의 가능한 한 빨른 해결, 특히 모든 일본인 및 한국인 납치 피해자의 즉시 귀국 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다.

(나) 2013년 3월의 인권이사회에서는 새롭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설치를 포함한 결의가 무투표로 채택되었으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일본, 한국, 미국, 영국, 태국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2014년 2월에 최종 보고서(COI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 또한 유엔 안보리에서도 2014년 12월에 인권 상황을 포함한 북한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후 '북한 상황'에 관한 유엔 안보리 회담을 4회 개최하였으며 일본은 납치 문제의 한시라도 빠른 해결을 요구해 왔다.

2020년 12월에는 안보리 비공식 협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후 일본을 포함한 관련국들은 납치 문제의 조기 해결, 특히 납치 피해자의 즉시 귀국을 강력히요구한다 내용이 포함된 공동 성명를 발표했다.

(라) 아울러 일본 정부는 유엔 본부 등에서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공조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2021년 6 월에는 일본, 미국, 호주 및 EU의 공동 주최로 납치 문제에 관한 온라인 유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일본의 납치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일본, 미국,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을 개최해 납치 문제의 한시라도 빠른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촉구했다.

납치 문제에 관한 온라인 유엔 심포지엄에서 기조 강연을 하는 가토 내각관방장관 겸 납치문제담당 대신 (당시) (2021년6월)

2. 6자회담

일본은 6자회담에서도 납치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2005년 9월에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는 납치 문제를 포함한 제반 현안 해결을 기초로 국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6자회담 목표중 하나로 명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2월 성과문서에서는 일조 국교 정상화를 위한 작업부회 설치가 결정되었으며 10월 성과문서에서는 일조 양측이 일조 평양선언에 의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기초로 조기에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것, 이를 위해 일조 양측이 정력적으로 협의해 구체적인 행동을 이행할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서 언급된 '현안 사항'에는 납치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6 자회담 (2007 년 9 월)

3. 다자간 협의

일본 정부는 G7 정상회의, 일미호인 정상회의, ASEAN 관련 정상회의 등 다자간 협의에서도 납치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은 각국으로부터 명확한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에 열린 콘월 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당시) 는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G7의 전면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청하여 G7 각국의 지지를 얻었으며, 정상 코뮈니케에도 G7으로서 북한에 대해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도록 축구하는 내용이 기제되었다. 또한 2021년 9월에 열린 일미호인 정상회의에서도 스가 총리(당시) 는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한 각국의 이해와 협력을 요청하여 각국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G7 콘월 정상회의 (2021년 6월)

일미호인 정상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커미트먼트를 제확인하고, 또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그리고 2021년10월에 열린 ASEAN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일련의 회의 등을 통해 기시다 총리는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각국의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청하여 각국으로부터 납치 문제 해결에 대한 지지를 얻은 결과, 의장성명에는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었다.

일ASEAN 정상회의 (2021년 10월)

4. 양자 회담

트럼프 대통령(당시)과 납치 피해자 가족의 면담 (2019 년 5 월)

일본은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 정상과의 회담, 외교장관 회담 등에서도 납치 문제를 거론해 오고 있으며 각국은 일본의 입장에 대해 이해와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당시)은 아베 총리(당시)의 요청에 따라 2018년 6월에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납치 문제를 거론하였고 2019년 2월에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첫째 날의 첫 일정인 일대일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당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납치 문제를 제기하여 납치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당시)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열린 소규모 만찬회에서도 납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정상 간의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당시)은 2017년 11월과 2019년 5월 방일 당시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하여 가족들의 진심 어린 호소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가족들을 격려했다.

스가 총리(당시)는 2021년4월에 바이든 대통령과 진행된 일미 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청하여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요구하는 미국의 커미트먼트가 다시금 표명되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2021년 9월에 취임한 이후, 10월에 진행된 바이든 대통령과의 일미 정상 전화회담에서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청하여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기회를 통해 북한에 납치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2019년 12월에 열린 일한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납치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도 북한에 대해 납치 문제를 반복적으로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에 진행된 문 대통령과의 일한 정상 전화회담에서 납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를 요청하고 문대통령으로부터 일본의 입장에 대한 지지가 표명되었다. 중국의 경우, 2019년 6월 일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같은 달에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일조 관계에 대한 아베 총리(당시)의 생각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으며 더불어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일조 관계 개선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강한 지지를 얻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에 시진핑 주석과의 일중 정상 전화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대응을 제기하고 일중이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북한에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에 관한 결의안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에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에 관해 일본 , 중국 및 한국 정부와 공조하여 조사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이 2016 년 9 월에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 채택되었다 .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2018 년 11 월에 상원 본회의에서도 가결 , 채택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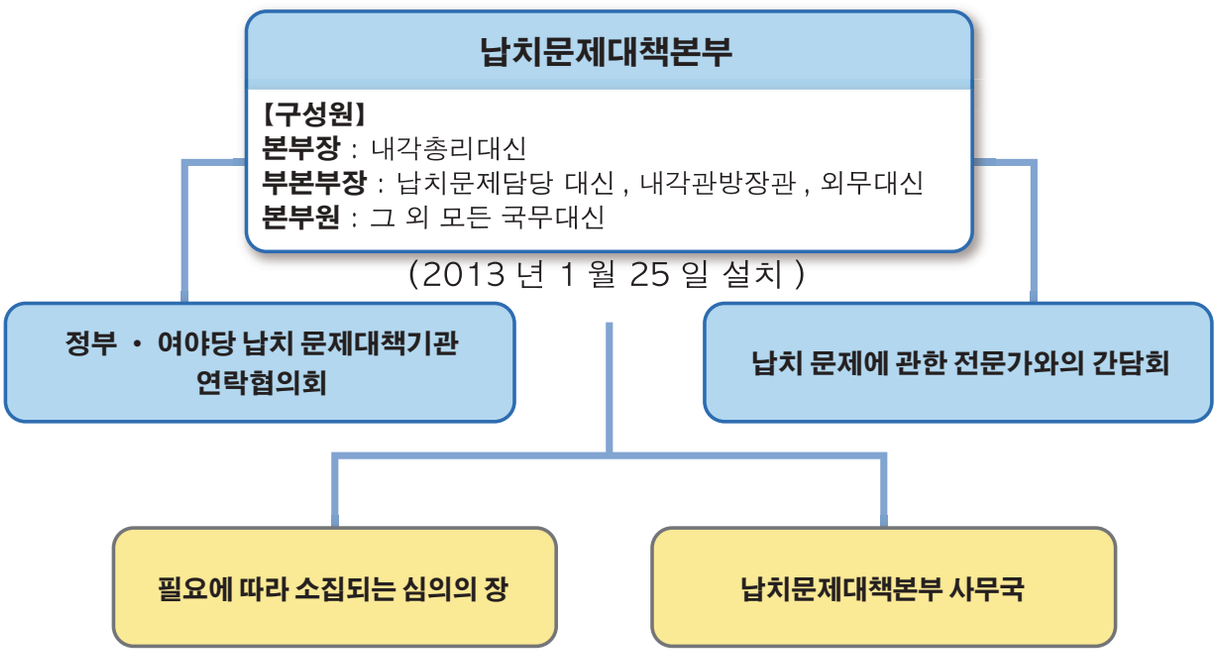
4 일본 국내에서의 노력

1. '납치문제 대책본부' 설치 등

2013년 1월,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에 관한 대책을 협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인 노력과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국무대신으로 구성된 '납치문제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 대책본부는 총리대신이 본부장을 맡고 납치문제담당 대신, 내각관방장관과 외무대신이 부본부장을 맡으며 각 각료들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본부장, 부본부장을 중심으로 긴밀히 공조하며 각 책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납치문제대책본부 제 1 차 회의
(2013 년 1 월)

또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인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당 납치 문제 대책기관 연락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침 및 구체적인 시책

1. 방침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는 일본의 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의 해결 없이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납치 피해자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즉시 귀국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한 납치에 관한 진상 규명, 납치 실행범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2. 구체적인 시책

위와 같은 방침 하에 각 각료는 본부장, 부본부장을 중심으로 긴밀히 공조하고 아래 8개 항목에 대해 각 책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

① 조기 해결을 위한 북한 측의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 대응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현행 법제도 하에서의 엄격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

② 일조 정부간협의를 비롯해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북한 측에 대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③ 납치 피해자 및 북한 정세에 관한 정보수집, 분석 및 관리를 강화한다.

④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에 관한 수사 및 조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납치 실행범에 관한 국제수사를 포함한 수사 등을 계속한다.

⑤ 납치 문제가 결코 퇴색되거나 잊혀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교육 현장을 포함한 일본 국내 지역의 각계각층 및 각종 국제사회의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일본 국내외 여론 조성을 한층 강화한다.

⑥ 미국,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과의 긴밀한 공조 및 유엔을 비롯한 다자간 협의를 통해 국제적인 협조를 더욱 강화한다.

⑦ 납치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세심한 대응, 귀국한 납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 및 향후 납치 피해자 귀국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⑧ 그 외 납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침 및 구체적인 시책' 2013년 1월 25일 납치문제대책본부 결정)

기시다 총리와 납치 피해자 가족의 면담 (2021년 10월)

2. 일본 정부의 수사 및 조사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안 및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귀국한 납치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협력을 얻어 철저하게 수사 및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 및 조사 결과, 지금까지 12건 17명을 일본인 납치 피해자로 인정했다.

또한 경찰은 조선적(朝鮮籍)을 가진 남매가 일본 국내에서 납치된 사안 1건(피해자 2명)에 대해서도 북한에 의한 납치용의 사안으로 판단을 내리고 북한 공작원 등 납치에 관여한 1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국제 수배를 내렸다.

또한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의 수사 및 조사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경찰청 외사과에 설치된 '특별지도반'이 도도부현 경찰을 대상으로 지도 및 조정하고 가족 등으로부터 DNA 감정 자료 채취, 경찰청과 도도부현 경찰의 인터넷 사이트에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과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을 게재하는 등 대처를 강화하여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난 사안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경찰과 해상보안청이 공조를 강화해 수사 및 조사를 하고 있다.

■ 납치용의 사안과 관계된 국제수배 피의자

사안 (사건) 명	남매 납치용의 사안	우시쓰 사건	아베크 납치용의 사안 (후쿠이)	아베크 납치용의 사안 (니가타)		
피의자	홍수혜 (일본명 기노시타 요코)	김세호	신광수	통칭 최순철	통칭 한금녕	통칭 김남진
국제 수배 세월	2007 년 4 월	2003 년 1 월	2006 년 3 월	2006 년 3 월	2007 년 2 월	2007 년 2 월

사안 (사건) 명	모녀 납치용의 사안	유럽에서의 일본인 남성 납치용의 사안		신광수 사건		유럽에서의 일본인 여성 납치용의 사안
피의자	통칭 김명숙	모리 준코	와카바야시 사키코 (결혼 전의 성 : 구로다)	신광수	김길욱	우오모토 기미히로 (결혼 전의 성 : 아베)
국제 수배 세월	2006 년 11 월	2007 년 7 월	2007 년 7 월	2006 년 4 월	2006 년 4 월	2002 년 10 월

3. 납치 문제에 관한 주요 홍보 및 이해촉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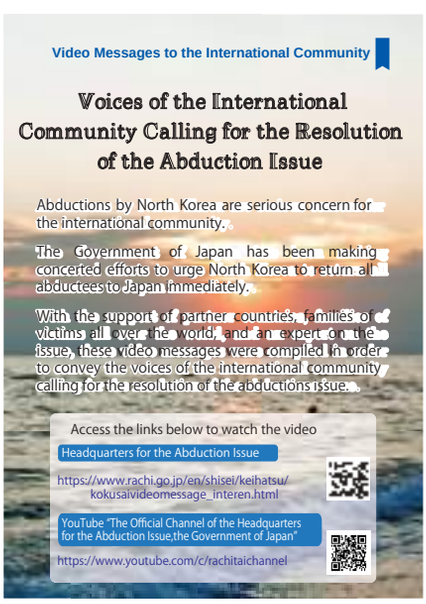
2006년 6월,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납치 문제 등')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동시에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 납치 문제 등의 실태를 규명하고 이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납치 문제 및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었다. 이 법은 납치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무, 그리고 납치 문제 등의 계몽을 꾀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북한 인권침해문제 계몽주간(12월 10일~16일)의 지정 및 이

기간 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계몽사업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소책자와 포스터 배포, 납치 문제 계몽 영화와 애니메이션 상영, 각종 연수회에 직원 파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작문대회, 교사와 교사 지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 대북 라디오 방송(일본어, 한국어), 납치 문제 계몽을 주제로 한 무대예술공연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 인권침해문제 계몽주간 동안 일본 정부와 NGO는 다양한 회의와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일본 국내외에 납치 문제 등의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메구미≫

납치 문제 계몽 포스터를 전국에 배포

2020년 10월에는 코로나 사태에서도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결의 하에 각국 정부와 일본 국내외 피해자 가족 및 지식인의 협조를 얻어 제작한 국제 홍보용 비디오 메세지집 “납치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발표하였다.



국제홍보용 비디오 메세지 집 “납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

4. 대북조치

2006년 7월 5일 북한은 탄도 미사일 7발을 발사했다. 그 후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2012년 4월, 같은 해 12월에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년 10월, 2009년 5월, 2013년 2월에 핵실험을 실행했다. 또한 2010년 3월에 북한은 한국 해군 초계함에 어뢰 공격을 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일본 정부는 엄중한 항의 및 단호한 비난의 뜻을 표명함과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한 대북제재조치와 함께 일본에서 북한으로의 도항 자제 요청, 북한적(籍)을 가진 사람의 원칙적 입국 금지, 북한 선적의 선박과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과의 수출입 금지 등의 대북조치를 취해 왔다.

2014년 5월의 일조합의에 근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일본 측은 인적 왕래의 규제조치와 지불보고 및 지불수단 등 휴대수출신고의 하한금액 인하조치를 해제하고 동시에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을 허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에 의한 2016년 1월의 핵실험 및 2월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따라 같은 해 2월에 인적 왕래의 규제 조치, 지불수단 등 휴대수출신고의 하한금액 인하 조치, 대북 지불의 원칙적 금지 조치, 인도적 목적의 선박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한 제삼국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추가 지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 해 3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70호에 의거해 유엔 안보리 결정 등으로 제재 대상 지정 선박의 입항금지조치와 자산동결 등의 대상이 되는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추가 지정 등의 대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2016년 9월, 북한이 같은 해에 들어서 두 번째 핵실험을 강행하고 20발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점, 그리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모든 납치 피해자를 귀국시키는 것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 북한을 둘러싼 정세를 고려해 같은 해 12월에 인적 왕래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북한에 기항한 일본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 및 자산 동결 등의 대상이 되는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추가 지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같은 해 11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21호에 의거해 자산동결 등의 대상이 되는 관련 단체 및 개인의 확대 조치 등을 실시했다.

북한은 2017년에도 3발의 ICBM급을 포함한 17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그 외에도 같은 해 9월에는 과거 최대 출력으로 추정되는 규모의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서 같은 해 6월, 8월, 9월, 12월에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56호, 제2371호, 제2375호, 제2397호가 각각 채택되었으며 이에 의거해 자산 동결 등의 대상이 되는 관련 단체 및 개인의 확대 조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일본은 독자적인 조치로 같은 해 7월, 8월, 11월, 12월에 자산 동결 등의 조치 대상이 되는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추가 지정을 실시했다.

5 납치된 13 세 소녀 요코타 메구미 씨

■ 지금으로부터 40 여 년 전인 1977 년 11 월 15 일, 일본해에 면한 니가타의 한 마을에서 소녀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요코타 메구미 씨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버지, 어머니, 쌍둥이 남동생과 함께 즐겁게 아침밥을 먹은 후 등교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이것이 가족들이 메구미 씨를 본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메구미 씨가 돌아오지 않는다 !!

그날 저녁, 동아리 활동인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메구미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걱정되어 필사적으로 메구미 씨를 찾았습니다. 경찰도 유괴, 사고, 가출, 자살 등 가정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는 물론 유류품조차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메구미 씨는 ——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나온 증언에 따르면 메구미 씨의 부모님이 필사적으로 메구미 씨를 찾고 있었을 때 메구미 씨는 이미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되어 40 시간 동안이나 북한으로 가는 배 안의 어둡고 추운 화물칸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메구미 씨는 "엄마, 엄마" 하고 울부짖으며 출입구와 벽 등을 긁었고 북한에 도착했을 때는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밝고 활발한 메구미 씨

메구미 씨는 밝고 명랑한 소녀였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마치 햇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주 좋아했고 서예와 클래식 발레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메구미 씨가 사라지기 전날인 11 월 14 일은 메구미 씨 아버지의 생신이었습니다. 메구미 씨는 아버지에게 머리빗을 선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멋 좀 부리세요' 라는 말과 함께.

가족들에게 찾아든 슬픈 나날들

메구미 씨가 사라진 날부터 가족들의 생활은 180 도 변했습니다. 화목했던 식탁은 불이 꺼진 듯이 쓸쓸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해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집안일을 끝내고 거리 여기저기를 돌아다녔고 메구미 씨의 이름을 부르면서 해안을 몇 킬로미터나 걷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아버지는 욕실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가족들이 모르게 혼자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당해야 하냐고, 죽고 싶다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런 단서도 없이 그저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

■ 그리고 20 년 후, 1997 년 1 월 21 일 ——

메구미 씨가 살아 있다 !

메구미 씨가 평양에 살아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시게루 씨와 어머니 사키에 씨는 '요코타 메구미' 라는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신문과 잡지에서 일제히 보도하고 국회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

일조 정상회담

2002 년 9 월 17 일에 고이즈미 총리 (당시) 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시) 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메구미 씨의 부모님인 시게루 씨와 사키에 씨는 드디어 메구미 씨를 만날 수 있다고 큰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날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시) 은 납치를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제공한 정보는 '요코타 메구미 사망' (5 명 생존, 8 명 사망, 2 명 미입북) 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북한의 설명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온 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한은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증거를 아직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4 년 11 월, 북한은 메구미 씨의 '유골' 을 제출했지만 감정 결과 그중 일부에서 메구미 씨와는 다른 DNA 가 검출되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 너를 되찾을 때까지 !

메구미 씨를 비롯한 납치 피해자들은 소중한 인생을 빼앗겼습니다. 그 가족들도 깊은 슬픔 속에서 지금도 소중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납치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국가 주권의 침해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납치 피해자를 구출해야 합니다.

사키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면 대자연 속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요. 북한에서는 도청기와 감시 카메라를 의식하며 조심스레 생활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홋카이도의 목장 같은 곳에서 큰 대자로 누워서 '자유다 ~!' 하고 외칠 수 있게 해 주고 싶어요.'

그로부터 40 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메구미 씨는 북한에 납치되어 있습니다.

6 납치 문제 Q&A

Q1 납치 문제란 무엇입니까 ?

A1 1970 년대부터 1980 년대에 걸쳐 북한은 많은 일본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끌고 갔습니다 (납치 = 본인이 원하지 않은데도 억지로 끌고 가는 것).

북한은 오랫동안 일본인 납치를 부인했지만 2002 년 9 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시) 이 고이즈미 총리 (당시) 와의 회담에서 처음으로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 하지만 납치된 일본인 중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었던 사람은 고작 5 명뿐이었습니다 .

5 명 이외의 납치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북한에게 조속히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Q2 북한은 왜 일본인을 납치했습니까 ?

A2 납치에 관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북한이 납치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범죄행위를 한 배경에는 공작원을 일본인으로 위장시키거나 일본인 위장 공작원의 교육에 이용하거나 또는 북한이 숨겨두고 있는 '요도호' 그룹 (주) 에 의한 인재 획득 등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주) 1970년 3월 31일, 일본항공 351편(통칭 '요도호')을 공중 납치한 범인과 그 가족 등을 가리키는 총칭.

Q3 북한은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 고 주장합니다 . 이 주장은 거짓말입니까 ?

A3 지금까지 북한은 납치 피해자 중 생존해 있는 사람은 모두 일본으로 귀국시켰고 남은 납치 피해자들은 '사망' 했거나 '입북한 사실이 없다' 는 이유를 들어 납치 문제는 '해결되었다' 고 주장해 왔습니다 .

그러나 북한이 '사망' 이라고 설명하면서 제시한 근거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

2014 년 5 월에 열린 일조 정부간협의에서 도출된 합의에 따르면 북한 측은 '기존 입장은 있으나' 모든 일본인에 관한 조사를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납치 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스톡홀름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

Q4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A4 일본 정부가 현재 인정하고 있는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는 총 17 명입니다 . 이 중 5 명은 이미 귀국했지만 나머지 12 명은 여전히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조선적 (朝鮮籍) 유아 2 명이 일본 국내에서 납치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

이 외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를 한시라도 빨리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 873 명 (2021 년 11 월 현재) 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외에서의 정보수집 , 수사 및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Q5 북한은 납치를 인정했는데 왜 아직 귀국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A5 납치 피해자가 일본으로 귀국해서 간첩 활동 등 북한에 불리한 사실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

예를 들어 북한 공작원이었던 김현희 씨는 1987 년 11 월에 일본인으로 위장하여 한국의 항공기를 폭파시켰습니다 . 김현희 씨는 납치 피해자 (다구치 야에코 씨) 로부터 일본어 교육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 그러나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관여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다구치 씨를 귀국시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Q6 어떻게 되면 납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

A6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
①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바로 귀국시킬 것 .
② 북한이 납치 피해의 진상을 밝힐 것 .
③ 북한이 납치를 실행한 자를 일본에 인도할 것 .

Q7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A7 일본은 북한에 대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과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대북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 간의 회담이나 국제회의 등의 기회를 통해서 각국에 이해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들의 수사 및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Q8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어떤 협상 방침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

A8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 방침은 일조 평양선언에 의거하여 납치, 핵 및 미사일과 같은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 스톡홀름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모든 시책을 강구해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하루빨리 실현하고자 합니다.

Q9 납치 문제를 국제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A9 2014년 2월에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의 최종보고서에서는 북한에 의한 납치 사안 피해자의 출신 국가가 일본 외에도 한국, 레바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루마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등 다양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납치 문제는 피해자가 있는 국가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 국제적으로 추궁해야 할 인권 문제입니다. 2014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위의 COI 보고서 내용에 기초한 결의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었으며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는 매년 북한인권상황결의가 채택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는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Q10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국민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A10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1,500 만 명(2021년10월 현재) 이상의 납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

이와 같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납치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 하루라도 빨리 모든 납치 피해자를 되찾겠다는 강한 결의가 표명된 것은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 커다란 힘이 됩니다 .

납치 문제의 경위

1977년		납치 사안 발생(2~3쪽 1 2 3)
1978년		납치 사안 발생(2~3쪽 4 5 6 7 8 9)
1980년		납치 사안 발생(2~3쪽 10 11)
1983년		납치 사안 발생(2~3쪽 12)
1991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해 납치 문제를 제기. 북한은 완강히 부인.
1997년	3월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연락회(가족회)' 결성
1998년	8월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2002년	9월	제1차 일조 정상회담 (장소: 평양). 일조 평양선언에 서명.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납치 문제를 인정하고 사죄.
		진상조사팀 파견
2002년	10월	납치 피해자 5명 귀국
	12월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2003년	8월	6자회담 제1차 회담
2004년	5월	제2차 일조 정상회담(장소: 평양)
		북한에 남아 있던 납치 피해자(2002년 10월에 귀국) 가족 5명이 귀국.
		생존 여부를 알 수 없는 납치 피해자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즉시 '백지' 상태에서 본격적인 조사 재개를 약속. 소가 히토미 씨 일가가 자카르타에서 재회, 일본으로 귀국(7월).
	11월	일조 실무자협의(장소: 평양)
		북한이 요코타 메구미 씨의 '유골'이라고 인도한 뼈의 일부에서 메구미 씨의 것과는 다른 DNA를 검출. 북한에 강력 항의.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 발표
	12월	12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초로 '북한인권 상황결의' 채택
2006년	2월	일조 포괄병행협의(장소: 중국 베이징)
	4월	납치 피해자 가족들, 부시 미국 대통령을 면담(장소: 미국 워싱턴)
	6월	'납치 문제와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 통과
	7월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7발)
		일본, 독자적인 대북조치 발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695호 채택
	9월	납치문제대책본부 설치
	10월	북한, 핵실험 실행 발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채택
		납치문제대책본부 제1차 회의에서 '납치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 방침' 결정
2007년	3월	제1차 일조 국교 정상화를 위한 작업부회(장소: 베트남 하노이)
	9월	제2차 일조 국교 정상화를 위한 작업부회(장소: 몽골 울란바토르)
2008년	6월	일조 실무자협의(장소: 중국 베이징)
		납치 문제 재조사에 대해 합의
	8월	일조 실무자협의(장소: 중국 선양)
		납치 문제에 관한 전면적인 재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합의
	9월	북한, 조사 개시 보류를 통보
2009년	4월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7월까지 8발)
		일본, 독자적인 대북조치 발표
	5월	북한이 핵실험 실행(2번째)
	6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874호 채택
		일본, 독자적인 대북조치 발표
	10월	납치문제대책본부 설치(2006년에 설치한 이전 대책본부는 폐지)
2010년	3월	북한, 한국 초계함(천안)호에 어뢰 공격
	5월	일본, 독자적인 대북조치 발표
	11월	북한, 한국 연평도 포격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012년	4월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12월까지 2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취임
	11월	일조 정부간협의(장고: 몽골 울란바토르)
2013년	1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087호 채택
		납치문제대책본부 설치(2009년에 설치한 이전 대책본부는 폐지)
		납치문제대책본부 제1차 회의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침 및 구체적 시책' 결정
	2월	북한이 핵실험 실행(3 번째)
		일본, 독자적인 대북조치 발표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094호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치 결정
	8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아베 총리대신 예방
2014년	3월	요코타 메구미 씨의 부모님과 김은경 씨(메구미 씨의 딸) 만남(장소: 몽골 울란바토르)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를 정식 제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7월까지 11발)
		일조 정부간협의(장소: 중국 베이징)
	4월	납치 피해자 가족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면담
	5월	제2차 일조 정상회담 10주년을 기념해 후루야 납치문제담당 대신이 담화문 발표
		일조 정부간협의(장소: 스웨덴 스톡홀름)
		북한 측은 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 실시를 약속
	7월	일조 정부간협의(장소: 중국 베이징)
		북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및 조사 개시. 일본, 대북조치 일부 해제
	9월	일조외교당국간회담(장소: 중국 선양)
	10월	특별조사위원회와의 협의(장소: 평양)
2015년	3월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2발)
	6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현지 사무소 개설(장소: 서울)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 개최(장소: 스위스 제네바)
2016년	1월	북한, 핵실험 실행(4번째)
	2월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10월까지 23발)
		일본, 독자적인 대북조치 발표
		1월의 핵실험과 2월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조치를 발표. 그 후 북한은 납치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 조사의 전면 중지 및 특별조사위원회 해체를 일방적으로 선언
	3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270호 채택
	6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국무위원장에 취임
	9월	북한, 핵실험 실행(5번째)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21호 채택
	12월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 개최(장소: 미국 뉴욕)
		일본, 독자적인 대북조치 발표
2017년	2월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11월까지 17발)
	6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56호 채택
	7월	일본, 독자적인 대북조치 발표
	8월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1호 채택
		일본, 독자적인 대북조치 발표
	9월	북한, 핵실험 실행(6번째)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 채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일반토론 연설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언급
	11월	납치 피해자 가족,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
		일본, 독자적인 대북조치 발표
		미국,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
	12월	일본, 독자적인 대북조치 발표
		'북한의 상황'에 관한 안보리 회의 개최(4년 연속 4번째)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 채택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장소: 판문점)
	5월	남북정상회담(장소: 판문점)
	6월	북미 정상회담(장소: 싱가포르)
	9월	남북정상회담(장소: 평양)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장소: 베트남 하노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상황결의' 채택(12년 연속 12번째)
	5월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11월까지 20발 이상)
		납치 피해자 가족,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면담(장소: 판문점)
	12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상황결의' 채택(15년 연속 15번째)
2020년	3월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10월 현재까지 8발)
	12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상황결의' 채택 (16년 연속 16번째)
2021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상황결의' 채택(14년 연속 14번째)
		북한, 탄도 미사일 등 발사(10월까지 6발)

2002년에 납치 피해자 5명이 귀국한 이후 단 한 명도 귀국하지 못한 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일천추의 마음으로 귀국을 고대하고 계시는 납치 피해자 분들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납치 피해자 분들도 가족분들도 고령이 되시는 가운데,납치 문제 해결에는 일각의 유예도 없습니다.

납치 문제는 기시다 정권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육친의 귀국을 강력히 촉구하는 가족 분들의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간절한 마음을 다시금 가슴에 새겨, 납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그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행동해 나가겠습니다.

내각관방장관
겸 납치문제담당 대신

마쓰노 히로카즈

2021년11월

납치 문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납치문제 검색

◆ **홈페이지** https://www.rachi.go.jp/kr/

◆ **YouTube 납치문제대책본부 공식 동영상 채널**
https://www.youtube.com/c/rachitaichannel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납치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문의 또는 자료를 청구하실 분들은
납치문제대책본부 사무국으로 이메일 또는 FA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납치 관련 정보 제공용 이메일 주소** info@rachi.go.jp
◆**문의 및 자료 청구용 이메일 주소** g.rachi@cas.go.jp
◆**FAX** **+81-3-3581-6011**

문 의 처

내각관방 납치문제대책본부 사무국
(우)100-8968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초 1-6-1
TEL +81-3-3581-8898 FAX +81-3-3581-6011
http://www.rachi.go.jp/kr/

외무성
(우)100-8919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2-2-1
TEL +81-3-3580-3311
https://www.mofa.go.jo/mofaj/

2021년 11월 발행

사진 제공: 내각 홍보실, 주식회사 지지통신사, AFP=지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 UN Photo/Loey Felipe